

불가리아

IMF와의 협상 타결에 따라 공공부문 개혁 및 긴축 재정정책 추진

IMF는 불가리아 정부에 대해 올해 2월 신규 차관 제공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IMF의 불가리아에 대한 확대신용공여(extended fund facility)의 유효기간이 작년 초에 만료됨에 따라 양측은 이 신용공여를 대체할 자금에 관한 본격적인 협상을 작년 9월에 시작하였다.

협상 전망은 처음에는 그리 밝지 않았으나, 양측이 작년 12월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올해 2월중 신규 차관에 대한 IMF 이 사회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초기에는 과연 불가리아 정부가 IMF의 조건을 받아들여 거시경제정책 운용을 양보할 것인지가 의심스러웠으며,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1년 만기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신용공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대외경제환경 악화에 따라 불가리아 정부는 결국 IMF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고, 차관은 2년 만기 3억 달러로 결정되었다.

유로본드 발행계획 포기

이 자금공여와 관련하여 IMF가 제시한 주요 조건 중 하나는, 현재 GDP의 60%를 웃도는 높은 수준인 불가리아의 대외채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불가리아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건으로 말미암아 금년으로 계획되어 있던 불가리아의 두 번째 유로본드 발행이 연기되었다.

작년 10월 불가리아는 역사상 처음으로 유로본드를 발행하였는데, 당초 1억 유로 정도로 예정되었던 이 유로본드의 발행규모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2억 5,000만 유로(2억 3,300만 달러)로 늘어났고, 발행되자마자 투자자들 사이에 높은 인기를 누리며 단시일 내에 매각이 완료되었다.

이러한 성과에 한껏 고무된 불가리아 정부는 금년 중 7억 유로 규모의 유로본드 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IMF는

만약 불가리아 정부가 해외채권을 계속 발행한다면 정부지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는 재정수지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여, 대외채무비율을 상승시킬 어떤 정책수단도 최대한 회피할 것을 지속적으로 경고하였다.

이에 불가리아 정부는 11월 하순까지도 유로본드 발행을 계속하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결국 12월 11일 IMF와의 협상이 타결될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유로본드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한 발 후퇴함으로써 금년 중의 유로본드 발행 계획을 사실상 포기했다.

에너지 부문 자유화, 난관에 봉착

IMF와의 협상에서 불가리아 정부는 이미 예산과 조세 부문에 대한 IMF의 요구를 받아들여 몇몇 중요한 양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에너지 부문과 철도 부문을 중심으로 한 공공 부문에서도 보다 시장 지향적인 접근을 요구받았다.

IMF는 불가리아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낮아서 전력회사가 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점을 줄곧 지적해 왔으며, 이에 따라 불가리아 정부는 작년 10월 초순 가정용 전기요금을 10%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하였다. 그러나 IMF 관계자들이 불가리아 정부가 제시한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안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10월 하순에 불가리아 주재 IMF 대표인 소르사(Piritta Sorsa)는 20.2%의 전기요금 추가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IMF는 전력산업 규제 독립, 송배전(送配電) 부문 민영화, 전력공급자와 대형

전력소비자간에 전력공급계약을 정부 개입 없이 직접 체결하도록 하는 등 전력시장의 빠른 자유화를 요구하였다. IMF는 또한 지역난방회사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에도 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불가리아 정부는 에너지 부문의 자유화에 열의를 보여왔다. 대형 소비자들과 전력 공급자간의 계약 직접 체결은 금년 초부터 허용되는데, 다만 현재는 시행 첫 단계이므로 시장 전체의 10% 규모에까지만 허용된다. 송배전회사의 민영화도 이미 금년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10%의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이 작년 10월 발표된 이후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둘러싼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불가리아 최고행정법원은 이 인상조치가 국민 생활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는 점을 들어, 이 조치가 고용주, 노동조합 및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3부평의회(tripartite council)에서 논의되어 최종 승인을 얻기 전까지 그 효력의 발생을 유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영화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하여 노조가 갈수록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이 실제로 인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철도 부문 구조조정을 놓고 정부와 노조간 대립

IMF와의 협상에서는 철도 부문 구조조정 문제도 논의되었는데, 국영 철도회사를 시설 관리와 철도 운영을 분리해서 담당하는 두 개의 회사로 나누는 구조조정 방안이 내년 중 실행될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책정된 7,000만 레바(3,200만 달러)의 보조금은 철도 운영 담당 회사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보충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재정 문제에 시달려온 국영 철도회사는 철도노동자들의 10월분 임금을 12월 초까지도 지급하지 못했다. 체불임금을 2002년 3월까지 전액 지급하겠다는 불가리아 정부의 약속은 철도 노동조합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노동조합은 체불임금이 12월 말까지 전액 지급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다행히 파업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으나, IMF는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보조금을 정부가 지급하는 데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떨어지는 적자 노선의 폐쇄를 통한 비용 절감을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인 불가리아 정부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현재 피폐한 불가리아 산업계에서 철도 부문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노동쟁의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산업 부문의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불가리아 정부가 IMF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대규모의 철도 파업이 발생하여 정국을 뒤흔들 수 있다.

긴축 재정정책의 추진

불가리아 정부가 협상 초기에 이미 받아들인 IMF의 요구조건 중 하나는, 미국 9·11 테러사태로 더 심해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가리아의 경상수지 적자 증가 등에 비추어 2001년도 4/4분기 예산을 보다 긴축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예산적자 목표치는 2001년에

당초 목표인 GDP의 1.5%에서 GDP의 0.9%, 또는 2억 2,800만 레바로 축소 조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의 예산적자가 4,000만 레바로 전년 동기의 1억 8,200만 레바에서 크게 감소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으며, 불가리아 정부는 예산적자가 목표치까지 감축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동시에 불가리아 정부는 현재 국가 재정 상태가 전임 행정부가 주장했던 것만큼 튼튼하지 못한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임 행정부가 물리날 무렵의 재정수지는 1억 3,000만 레바의 흑자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3억 레바의 외채이자 지불유예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오히려 병원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하면 1억 8,100만 레바의 예산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불가리아 정부는 금년도 재정적자를 GDP의 0.8%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IMF는 현 여당인 시메온 2세 민족운동연합(SNM)이 작년 8월 공약한 감세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불가리아 정부의 금년도 세수 증대 계획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세수 증대 목표의 달성에 대하여 낙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IMF는 재투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방안에는 반대했으며, 이에 불가리아 정부는 즉시 동 방안을 철회했다. 불가리아 정부는 동 비과세 방안을 2003년에는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으나, IMF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吳 旻 駟】